

김 병 주 | 영남대학교 교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법률 제·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4일(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부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고등·평생교육 혁신을 위한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 가지 논란과 우려곡절이 있었지만,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 할 수 있다.

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근거와 규모

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법적 근거와 내용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법률 제19202호, 제정 2022.12. 31., 시행 2023.1. 1.)이다. 이법에 의한 특별회계의 세입은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¹⁾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정부와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이며,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법 제5조): ① 대학의 교육 ·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② 신기술 분야 등 국가 인재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③ 직업교육 등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④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⑤ 제7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⑥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규모와 재원

2023년에 설치된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9.74조원이다.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52조원이 고등 · 평생교육지원 특별 회계로 전입되었고, 일반회계에서 추가적으로 0.2조원이 지원되었다. 그리고 기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던 고등·평생교육분야 사업 중 8.02조원 수준의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예산이 특별회계로 이관되었다. 이는 교육부 고등교육 분야 사업(학자금 지원분 등 제외), 대학 평생·직업교육 관련 사업 및 서울대 · 인천대 운영지원 사업 등 7.7조원과 고용노동부에서 이관된 0.32조원을 포함한다.

〈표 1〉 정부의 고등교육재정지원 규모(2021년)

세 입 9.74조원	세 출 9.74조원
① 교육세 전입 : 1.52조원	① 사업 증액 및 신설 : 1.72조원
② 일반회계 추가 지원 : 0.2조원	– 교육분야 1.67조원, 타분야 0.05조원
③ 기존 사업 이관 : 8.02조원	② 기존 사업 이관 : 8.02조원
– 교육분야 7.7조원, 타분야 0.32조원	– 교육분야 7.7조원, 타분야 0.32조원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22.12.24.). 교육부 2023년 예산 및 기금 102조원 국회 확정: 고등 · 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고등교육재정 확충.

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교육부는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확충된 재원으로 ①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고, ② 지방대학을 지역 혁신의 중심(허브)으로 집중 육성하며, ③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하고, ④ 학문 간 균형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데에 활용할 예정이다.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7조원 주요 증액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 전문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고, 맞춤형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일반재정지원 지원 규모를 3,924억원 증액하여 전년 대비 1.4배 확대하였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8,057억원(22년 대비 +2,299억원),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는 5,620억원(22년 대비 +1,600억원)으로 증액되어, 1교당 평균 지원 규모는 대학 69억원(22년 49억원), 전문대 54억원(22년 39억원)으로 늘었다. 아울러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사업’으로 25억원을 마련하여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정진단 결과 및 대학의 수요를 바탕으로 경영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지원한다.

둘째, ‘지역 혁신의 중심(허브)’으로서 지방대학 집중 육성을 위해 5,314억원을 증액하였다. 여기에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1.4배 확대하고, 지방 사립대학이 지역의 특성화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혁신계획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혁신지원사업의 비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1,900억원(66교에 교당 28.8억원) 규모의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과 600억원(69교에 교당 8.7억원) 규모의 지방전문대학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며, 지자체-대학간 협력체계인 지역혁신플랫폼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예산을 380억원 증액하고, 278억원을 증액하여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중 대학원 혁신지원 사업(Glocal BK) 4개교를 추가 선정하며, 237억원을 증액하여 대학이 성인학습자의 직업전환 · 재교육 등에 적합한 평생교육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LiFE)’ 규모를 확대(34개교→50개교)하고, 491억원을 증액하여 전문대학이 기초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청년 인재의 지역 정주를 지원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을 확대(30→50개)한다.

셋째, 대학 교육 · 연구 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6,603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국립대학의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을 1조원 규모로 확대 지원하고, 석·박사급 고급인재가 안정적으로 연구·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 연구장학금을 1인당 월 30만원씩 인상한다.

넷째, 초 · 중등 미래교원 양성 고도화 및 학문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755억원을 증액한다. 교원양성과정을 개편 · 운영하는 ‘교원양성과정 고도화지원 사업’ 예산으로 105억원을 반영하고, ‘인문사회 기초연구 사업’과 ‘이공학 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이상과 같은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주요 증액 사업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고등 · 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9.7조원(+1.7조원)

정부안 대비

1 대학의 자율 혁신 촉진

(23년 정부안) 9,778억원 → (23년 예산) 1조 3,702억원 (+3,924억원)



대학 혁신지원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8,057억원 (+2,299억원)	5,620억원 (+1,600억원)	25억원 (+25억원)

2 지방대학 집중 육성

(23년 정부안) 7,523억원 → (23년 예산) 1조 2,837억원 (+5,314억원)



지방 대학 · 전문대학 활성화 사업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국립대학 육성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
2,500억원 (+2,500억원)	3,420억원 (+380억원)	4,580억원 (+1,308억원)	510억원 (+237억원)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4단계 두뇌한국21 - Glocal BK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120억원 (+120억원)	807억원 (+278억원)	900억원 (+491억원)

※고용부 : 한국폴리텍 대학 운영 지원 2,787억원(+334억원)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운영 지원 500억원(+154억원)

3 대학의 교육 · 연구 여건의 획기적 개선

(23년 정부안) 1조 7,476억원 → (23년 예산) 2조 4,079억원 (+6,603억원)



국립대학 시설확충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4단계 두뇌한국 21	서울대 출연
1조 19억원 (+4,000억원)	2,680억원 (+1,500억원)	4,428억원 (+843억원)	5,775억원 (+180억원)
			인천대 출연
			1,177억원 (+80억원)

4 초·중·등 미래교원양성 및 학문 균형발전 지원

(23년 정부안) 2,306 → (23년 예산) 3,061억원 (+755억원)



교원양성과정 고도화 지원	인문사회 기초연구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105억원 (+105억원)	1,162억원 (+550억원)	1,794억원 (+100억원)



교육부

[그림 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주요 증액 사업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22.12.24.). 교육부 2023년 예산 및 기금 102조원 국회 확정: 고등 · 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고등교육재정 확충.

2. 고등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의 의의와 과제

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의 필요성과 의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의 의의는 무엇보다 대학의 심각한 재정난을 해소하는 데 미약하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들은 지난 14년간의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재정의 급격한 위축, 그로 인한 정상적 대학 운영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대학재정의 총량규모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로 인한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는 심각하다. 재정부족으로 내구연한을 넘긴 대학시설 및 실험실습 기자재가 “방치”되어 절반을 훨씬 넘는 대학들(54.2%)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한 교육 및 실험실습기자재 비율이 50%를 초과한다. 등록금 등 재정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운영지출(11년 → 21년)은 20.7%(2조 6,146억원) 증가하여 21년 기준 서울 주요사립대 10곳중 8곳이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운영수지 적자 대학이 2012년 44개에서 2015년 89개로 증가하였고, 2018년에 조사대상의 75%인 105개대학이 적자를 면치 못하였다. 특히, 지방대학은 대부분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였다.

사립대학의 ‘교육을 위한’ 재정 투자는 2021년 1.4조원으로, 2011년 1.8조원 대비 3,462억원(19.6%) 감소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실험실습비(30.0%), 도서관입비(26.0%), 연구비(22.0%), 학생지원비(21.4%), 기타학생경비(21.1%), 기계기구매입비(4.8%) 순으로 감소하였다. 사립대학의 등록금 수입에서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는데, 각종 평가로 인해 전임교원 총원율은 계속 올라가고 대학재정 총액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인건비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등록금 대비 인건비 비율이 80%를 초과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 2010년 21개교에 불과하던 인건비 비율 80% 초과대학은 2019년 55개교로 급증하였다. 이는 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다.

OECD 평균 국민 1인당 GDP대비 정부부담 대학생당 교육비 지출액 비율은 24.2%인데, 우리나라는 10.7% 수준으로서 OECD 34개국 중 꼴찌 수준이다.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11,287에 불과한데, 이는 OECD평균(\$17,559)의 64%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등학교(\$17,078)는 물론 초등학교(\$13,341) 보다도 못하여 중고교의 66%, 초등학교의 84% 수준에 불과하다(OECD 교육지표 2022). 특히 <표 2>에서 보듯이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한국과 OECD평균과의 격차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2〉 최근 10년간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OECD 평균과의 격차

(단위: 달러, %)

구분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한국	OECD 평균	격차	대비 비율	한국	OECD 평균	격차	대비 비율	한국	OECD 평균	격차	대비 비율
2010('13)	7,453	7,974	△521	93.5	8,060	9,014	△954	89.4	9,972	13,528	△3,556	73.7
2014('17)	9,656	8,733	923	110.6	10,316	10,106	210	102.1	9,570	16,143	△6,573	59.3
2017('20)	11,702	9,090	2,612	128.7	13,579	10,547	3,032	128.7	10,633	16,327	△5,694	65.1
2018('21)	12,535	9,550	2,985	131.3	14,978	11,192	3,786	133.8	11,290	17,065	△5,775	66.2
2019('22)	13,341	9,923	3,418	134.4	17,078	11,400	5,678	149.8	11,287	17,559	△6,272	64.3

주: 1) 격차는 OECD 평균 대비 한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차이, 대비비율은 OECD 평균 대비 비율임

2) △는 (-)를 의미함 3) 연도는 자료 기준연도(OECD 발간연도)

4)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2020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

자료: 각 연도별 「OECD Education at a Glance」;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포커스, 제1호, 2022.11.7.

이러한 결과로 고등교육의 국제적 경쟁력은 국가경쟁력 순위와 함께 동반 하락하고 있다. IMD 국가경쟁력은 '11년 22위에서 '19년 28위로, IMD 대학교육 경쟁력은 '11년 39위에서 '19년 55위로 하락하였고, 2021년 QS 아시아대학평가에서 논문수 톱 100에 중국과 일본은 49개 대학이 포함되었지만, 한국은 5곳에 불과하였다(조선일보, 2021.11.3.).

이제 명실상부한 OECD 국가로의 도약에 맞추어 OECD 평균수준 이상의 고등교육재정 확보 및 지원이 절실하다. 대체로 후진국일수록 초등교육의 투자수익이, 선진국일수록 고등교육의 투자수익이 높다. 국가의 미래는 고등교육의 질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를 위해 적정 수준의 대학재정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설치는 단비와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은 국가의 경제발전 뿐만 아니라 교육기회의 확대, 교육 불평등의 해소, 사회적 통합 등의 기반이 된다. 고등교육 여건이 열악하고, 학생부담수준이 높다는 현실적 이유에서도 특별회계 신설의 의의가 있다.

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의 논리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의 근본적인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인식할 때,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 물론 대학재정의 일차적인 책임이 대학 스스로에 있음을 고려할 때, 대학등록금의 합리적인 책정, 재단과 대학 스스로의 다양한 재원확보방안 모색 및 재정운영의 효율화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특히 갈수록 교육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는 한정된 교육재원의 투자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부금을 비롯한 다른 재원의 확보가 매우 어렵고, 대학등록금 인상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학재정에 대한 국고의 확대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대학재정의 궁극적인 책임은 대학 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 모두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세분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의 논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교육은 상생하는 동반자 관계에 있다. 지역에서 초중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지역의 대학에 진학한다. 따라서 지방대의 발전과 존속이 지역 초중고교육 및 지역의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다. 현재 초중고생들도 머지않아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대학진학률이 70%를 초과하고, 청년층(만25~34세)의 고등교육이수율이 69.3%(OECD 교육지표 2022)로서 대부분의 자녀들이 결국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상황에서 특별회계의 설치의 꼭 필요하다.

둘째, 모든 단계의 교육은 국가의 장래를 위한 동일체이다. 유치원 교육이든, 초등학교 교육이든, 중고교 교육이든, 대학교육이든 모두가 국가의栋梁(棟樑)이 될 인재를 양성하는 하나의 '교육 체제'라는 점이다. 유초중등을 거쳐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균형적인 투자를 통해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의 육성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고등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대안개발이 필요하다. 그동안 대학재정난의 해소를 위해 교육계에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가칭)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교부금이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재원성격을 띠는 점에서 의무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지원으로서의 적절하나, '경쟁력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고등교육의 재원으로는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반대를 받아 왔다. 따라서 대안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넷째, 학령인구 구조변화를 반영한 교육세 기능 재편이 필요하다. 현행 교육세는 국세분교육세와 지방교육세로 이원화되어 있다. 교육세가 이원화되었다는 것은 각각의 교육세가 별도의 용도에 쓰여야 함을 의미하지만, 국세분교육세와 지방교육세는 세금징수주체만 다를 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교육세법제1조, 지방세법260조의2)라는 목적은 동일하다. 최근 초·중등학생수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현행 교육세구조를 유지할 경우 머지않아 교육세 존폐의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그러한 주장은 현실화되고 있다. 나아가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교육세의 폐지 주장까지 제기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등교육재정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세분 교육세의 일부를 고등교육 지원으로 전환할 경우 지방교육재정입장에서도 명분과 실리를 얻을 수 있다.

다섯째, 같은 맥락에서 고등교육 지원 전환을 통한 국세분 교육세의 선제적 대응은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Win-Win 전략이다. 국세교육세는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등 경기에 민감한 세원의 성격상 신장가능성이 떨어진다. 세원이 신장되지 않을 경우 세율을 올리거나 세원을 교체하여 세수를 확대해야 하는데, 유초중등만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세 세율인상이나 세원교체 논리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최근 초중등학생수가 급감하고 목적세로서 역할과 기능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교육세는 지속적으로 폐지의 대상으로 지적되어왔다. 교육세를 고등교육재원으로 개편할 경우 고등교육의 질적 개선논리로 교육세원을 바꾸거나 오히려 세율을 인상할 여지가 생기게 된다.

여섯째, 고등교육투자의 OECD 평균수준 달성과 정부의 고등교육 책무성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세분교육세를 고등교육재원으로 개편하는 것은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초·중등교육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원칙에 부합한다. 그동안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결손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정부는 2011년 등록금인상을 상한제가 도입된 이후부터의 연평균 결손분을 지원할 당위성이 있다. 이 경우 국·공립대학의 평균 3.2조원, 사립대학의 평균 1.6조원으로 연평균 총 4.8조원에 해당하는 규모의 결손분을 보전해야 한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는 대학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고지원이외의 대안이 없다.

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정착을 위한 과제

지난 달에 한 지자체의 교육균형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 교사와 학부모를 면담한 적이 있다. 이런 저런 면담을 하면서 한 교사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설치되어 국세분 교육세가 빠지면서 앞으로는 유초중등교육재정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 현장 교사와 학부모의 이러한 인식은 그동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 영향이 지나치게 침소봉대된 데 기인한다. 해당교사에게 국세분 교육세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은 1.5조원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유초중등교육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내국세 총액의 20.79%로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세는 GDP의 증가 등에 따라 매년 인상될 것이라는 점, 실제 유아 및 초·중등 부문은 2022년 예산 70조 7,301억원 대비 10조 1,819억원 증액한 80조 9,12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2022년 65조 595억원 대비 10조 7,011억원 증액된 75조 7,606억원으로 늘어났다는 점을 설명하니 그제서야 안심을 하는 것을 보았다.

다만, 우리에게도 과거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부족한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 지방채 등을 발행했던 아픈 기억이 있다. 특히 불안정한 내국세 추이를 볼 때 경기변동에 따라 교부금이 감소할 수도 있어서 향후 교부금 감소가 발생할 경우에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교육세 교부금 존치하여 일정 금액만 특별회계 재원으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교육세가 증가할 경우 남은 재원을 교부금으로 확보할 수 있고, 교부금이 줄어든 경우 교육세율을 조정하여 보전할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안정성 보완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내국세 교부금 증가분으로 인건비 예상 증가분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이 내국세 수입액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또는 내국세 수입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 지방교육재정에 과도한 잉여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내국세 교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의 혜택은 대학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교육체제 전체의 동반적인 성장을 위한 것이며, 장기적으로 현재의 모든 유초중등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대학교육의 중요성은 무시될 수 없다. 앞으로도 대학재정의 확충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편가르기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참고문헌]

- | 김병주(2022a).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의 의의와 재정확보 방안. 강원대 교육재정중점연구소 특별세미나. 2022.10.28.
- | 김병주(2022b).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학 재정 전략.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재정전략 정책토론회. 2022.11.4.
- | 김병주(2022c). “독자적인 재원을 갖는” 대학교육을 지원할 특별회계의 신설을 기대하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입법공청회. 국회 교육위원회. 2022.11.22.
- | 송기창(20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고등교육재정 개선방안. 2023 교육재정토론회, 국회예산정책처. 2022.11.15.